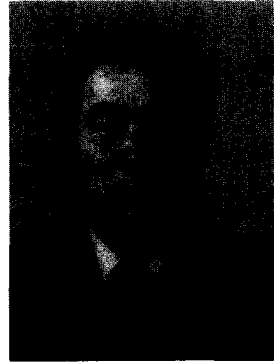


술 市場의 開放을 反對한다



박 창 훈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역할 기능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 국방, 전매업, 소방등 공공서비스나 財貨의 공급자가 되어야 하는 기능이고, 둘째 : 통화 금융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며, 셋째 : 제반 규정의 제정과 그의 집행자가 되는 기능등이다. 이 세번째의 규제 기능이야 말로 많은 심각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즉 시장기능의 自靜 및 自足能力을 信俵하는 파와 정부의 강력한 간섭을 옹호하는 파간의 논쟁 논리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중에는 물론 해로운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체제를 채용하는 나라가 모두 선진국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 사회, 문화, 윤리, 역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국가에서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시장경제를 채택만 하면 즉각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좋은 본보기를 근년에 새로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진입한 동구권 유럽

국가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발견하게 된다. 글자 그대로 철저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정부의 상당한 간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나 관행으로 미루어 보건데 정부의 고유권한인 규제기능을 최소화하고 경제는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판단된다. 규제기능을 소홀히 한 덕분에 경제주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통제를 하는 여건하에서도 연전에 油化업계가 나프타분해 공장을 너도 나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동률이 50%도 안되도록 과잉시설을 했기 때문에 당시 동업계 전체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나프타분해업종은 아직도 정부의 통제로 신규 공장 건설이 금지되어 있다.

삼성그룹의 승용차 생산 진출과 현대그룹의 제2 제철 진출은 아직도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상공자원부는 94. 9. 28. 「국내 철강산업의 장기수급전망상 포철등 기존 업계의 신증설계

획만으로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현대의 제이제철소 건립의사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93년에 국내 철강 공급량은 5백 14만톤 가량 부족하였으나 포철 한보등 11개 업체가 총 2천 2백여만톤 규모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2001년이면 7백 81만톤의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힘으로서 옹당히 해야 할 정부의 규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다른 한편 기존 업체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삼성승용차 진출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적 재정순실로 어어질 과잉투자방지와 기존투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규제조치이며 국가 전체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을 십분 발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상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의 육체 및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산업이 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도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막아야 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국민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는 옹당 규제를 엄격히 가해야 한다. 그 좋은 예가 유선방송(CATV)의 정부 허가 방침이었으며 전국 각지역에서 수십개의 후보회사들이 유선방송 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몇개의 엄선된 방송사만이 선정되어 내년 3월 방영을 목표로 시설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시중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민방에 대해서도 정부는 규제기능을 발휘, 엄선된 방송사만이 민방을 개설, 운영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역시 유선방송과 마찬가지로 국민 정신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본과 기술만 있다고 해서 방송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방임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즉 과잉투자방지와 국민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정부 역할의 측면에서 볼때 주류업계에 대한 면허개방등 주류시장 개방문제를 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방송보다 크면 컸지 적지않은 주류에 대해서 정부가 관대한 국내외적 문호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주류면허를 개방할 경우 소주와 주정업계 역시 막대한 과잉투자가 예상됨은 예외가 아니다. 주정업계의 현황을 살펴 봄으로서 예상되는 과잉투자를 점쳐 보기로 한다.

주정업계는 현재 주정(소주원료=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발효주정 생산 시설과 정제주정 생산 시설이 병존하고 있다. 발효는 전분질원료인 쌀등 각종 곡물을 이용하여 주정을 생산하며 정제주정이란 외국에서 주로 옥수수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제품 粗酒精을 수입하여 그를 우리 소주원료로 쓸수 있도록 순수하고 정제된 주정으로만든 것을 말한다. 발효주정이 되었던 정제주정이 되었던 그 원료는 곡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정의 연간 생산량은 1백십만여 드림(1드림은 200리터)이며 이중 93%는 소주용으로 소비된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 백만여드림의 주정을 생산하기 위해 주정업계가 갖추고 있는 시설중 발효주정 시설의 87% 그리고 정제주정 시설의 40%만 가동하면 가능하다. 즉 업계는 과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정의 과거 5년간의 매출 실적을 기준, 앞으로年間 약 3%의 주정수요 증가율을 전망할 때 우리의 기존 주정생산 시설은 증설없이도 앞으로 약 16년 이라는 세월, 즉 서기 2011년에 가셔야 현재 보유한 시설의 90% 가동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외부적인 영향, 즉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산 주류수입의 증가라든가 또는 건강을 이유로 음주인구가 감소한다든가 하는 등의 요인은 감안하지 아니 하였다. 다시 말해 주정업계는 앞으

로 15년 이상을 생산 시설의 증설 없이도 주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개방으로 새로운 주정공장이 업계에 진출한다면, 다시 말해, 단위 공장당 300억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주정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탄생된다면 엄청난 과잉투자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국내기업끼리의 지나친, 다시 강조하건데 지나친 경쟁을 하게 한다면 그 결과 자본력에서 또 경영능력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한 많은 주류업체들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의 도산은 기업을 하던 당사자들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등 제삼자에게 부실 채권을 안겨주고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의 결핍을 초래, 국가적 재정낭비를 가져오게되며 결과는 과중한 납세로 전체 국민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류업계가 진짜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스코트랜드는 물론 일본(싼토리위스키)과 같이 몰트위스키나 그레이 위스키를 생산하여 12년, 17년, 32년 또는 그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 그를 위한 노우하우가 선행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숙성을 위한 저장은 커녕 우리는 그때 그때 필요한 위스키 원주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수입한 원주를 단지 블렌딩(혼합)이라는 단순 작업을 통해서 블랜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생산, 판매할 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국제가격보다 5배 또는 10배가 고가인 국산 정책원료인 쌀과 보리, 고구마등을 사용하여 주정을 생산해야 하는 핸디캡이 있다. 국내 주류업계의 경쟁이 없어서 우리의 소주 값이 현재의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고가의 국산정책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값싼

수입원료로만 주정을 생산해서 소주를 만든다면 아마 현 소주 가격의 1/3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주류업계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니지만 주류업계중 대부분의 주정업체와 소주업체는 이제 막 영세성을 모면한 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업계에 면허개방으로 굴지의 재벌기업이 참여 했을 때 상당한 무리가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류업계의 영세한 대다수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재벌기업에 그 업권을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歪曲된 사태의 진전은 독점금지법에 완전히 역행하는 현상이다. 무방비상태의 주정공장이나 소주공장은 적자생존 법칙에 따라 일부는 도산할 것이고 나머지는 대 재벌기업에 흡수 통합될 것이며 결국 현 맥주시장 판도와 흡사하게 두, 세개의 주정공장이나 소주공장만이 살아남는 불행한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정부가 항상 강조하여 주장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영역을 재벌기업이 마구잡이로 침식함으로써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과 영역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부정책이 자칫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계속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주류가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도, 또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로서 과잉시설 투자 방지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주류산업의 면허 개방을 통한 시장 개방은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